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노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보도내용>

- 2026.9.3. 국민일보(가판)은 「“청년은 약자” 청년몰입이 만든 또 다른 소외 ‘노인’」 기사에서
 - “정부가 청년을 앞세우며 강조하는 ‘역대급’ 예산안 이면에 상대적으로 노인 소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노인 예산 증가율(9.5%)이 충분하지 않고, 노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 노인 예산 증가율을 청년 예산 증가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복지 분야 노인 부문 예산은 31.8조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전년 대비 2.8조원 늘어나 복지 분야 전체 증가율 9.3%보다 높은 9.5% 수준입니다.
 - 노인 부문 예산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및 노인일자리 등 '26년 기준 29.1조원 규모로 성숙하고, 안정적 제도가 기반이 되는 반면, 청년 예산은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등 대규모 신규 투자가 반영되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분야의 증가율만을 비교하여 ‘소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내년도 총지출 820.9조원 중 노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노인 부문’ 예산(31.8조원) 외에도 국민연금 급여 지급(59.5조원)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27.1조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1,558억원) 등 노인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청년 예산과 노인 예산은 ‘제로섬’ 형태의 대립하는 예산이 아니며, 청년 투자 확대는 노인 예산을 줄여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 청년 세대는 취업·자산형성·주거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자립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노인 부양 여력을 높이고 연금·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노인 정책·예산이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 빈곤 완화 및 노인 돌봄 강화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 정부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월 최대 38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6% 인상(월 35→38만원)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6.7%)를 통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약 14만원(월 207.8→221.7만원) 인상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노인 돌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26.3월) 이후,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시·군·구 지원을 확대(최대 10→16억원)하고, 취약지돌봄센터 설치·운영 사업(’27년 61억원)도 ’27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 노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국회, 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예산실 국민복지예산과	책임자	과 장	진민규 (044-214-2910)
		담당자	사무관	이상희 (leet88@korea.kr)
			사무관	김진수 (kimjinsu@korea.kr)

